〈성명〉 **버스 운행중단 위기인데 태평하게 돈 타령만?
전주시·버스위원회는 호남고속 문제 해결 나서라!**

수 신	각 언론사 시청 출입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답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010-5894-1155)

민주노총 호남고속지회(이하 호남고속지회)가 2월 23일부터 천막농성 및 아침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 징계, 단체교섭 회피 등 호남고속의 노동조합 탄압이 계속되는 탓이다. 상황이 점점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데, 정작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모인 ‘시민의 버스위원회’(이하 버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고 있다.

호남고속의 민주노조 탄압은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호남고속을 제외한 4개 업체는 민주노총과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호남고속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법원도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줘, 호남고속이 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2년 1월 12일)이 내려졌다.

하지만 호남고속은 요지부동이다. 호남고속은 올해 초 5년 전 사고기록까지 꺼내가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96명 중 징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58명에 이른다. 작년에는 2,400원 계산 실수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월 1일에는 징계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차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사면’이라 칭하고 버젓이 들이밀며 노동조합을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고속은 심지어 노동부의 대화 중재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호남고속지회는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매일 아침 노동부 앞 항의 선전을 진행해왔고, 4월 20일부터는 전주시청 앞으로 장소를 옮겨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호남고속의 노사갈등이 또다시 운행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시내버스 문제가 전주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노사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아 장기간 파업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파국을 계기로 버스회사의 전근대적 경영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버스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호남고속의 노사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정작 버스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아둔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3월 5일 열렸던 버스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이 김병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노사대화를 제의했지만 김병수 대표는 이를 묵살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버스위원회는 이런 사측의 태도를 방관한 채 화합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같은 자리에서 김병수 대표는 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투명성 이야기가 나오니 명찰을 집어던지며 회의장을 나가는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노동조합과 대화는 거부한 채 돈만 더 달라 떼쓰는 버스업체를 내버려 두고서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킬 방법은 없다.

노사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4월 23일(목)에는 버스위원회 운영분과 회의가 열린다. 돈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전주시와 버스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버스위원회 취지를 망각하지 말고 호남고속 과국을 막기 위해 나서라. 공영제운동본부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위원회 안과 밖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4. 22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